

# 백신 기대감에... '채권·金'서 위험자산으로 '머니무브'

국내 국고채 금리 오르면서 채권값 떨어지고 금값 출렁 외인, 국내 주식 순매수세 백신 낙관주의 우려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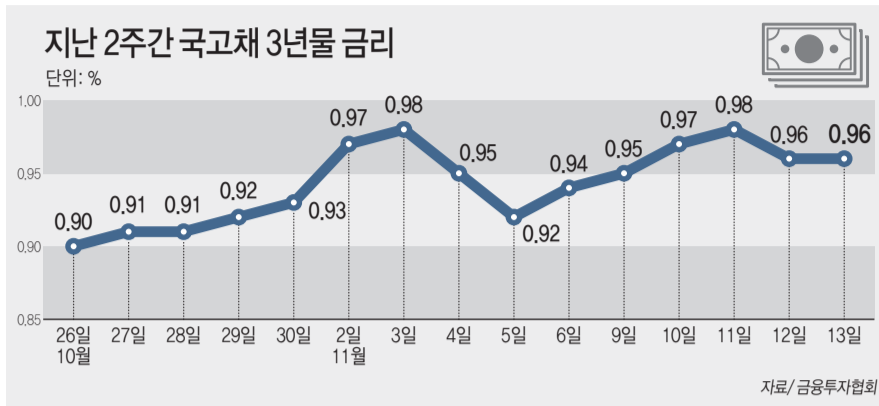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촉발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과 금 가격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자 미국 채권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채권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안전자산인 채권·금 하락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0.989%, 10년물 금리는 연 1.662%, 50년물 금리는 연 1.755%를 기록했다. 10월 초와 비교했을 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1%포인트, 10년물 금리는 0.183%포인트, 50년물 금리는 0.1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



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기대와 이로 인한 물량 부담·마찰적 금리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며 “주요국의 완화정책이 금리 상승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추가 금리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값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도 백신 관련 이슈로 시세가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8% (14,70달러) 내린 1860.7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점을 기록했던 8월 18일 기준 시세(1999.40달러)와 비교했을 때 7%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 미국 화이자

와 독일 바이오테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3상 중간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현지 시각),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53.20달러로 올해 기준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 ◆국내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달러약세, 원화강세가 지속되면 외국인은 통상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은 물론 환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다. 외국인인 코스피시장에서 7거래일 동안 3조5933억 원어치를 샀다. 외국인인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27조8052억 원어치를 순수하게 팔았다. 최근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는 이유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확대·통화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 경기도 함께 회복하면서 일방적인 달러강세가 어려워지는 큰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달러 약세로 외국인이 본격적인 한국 증시 비중 확대에 나설 개연성이 있고, 그동안 한국 주식을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은 풍부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국내 수출업체에 긍정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에선 백신 낙관주의에 대한 경고도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유로존 경제의 회복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이뤄지는 반복적인 주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 1면 '메가 FTA 출범'서 계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시장 교역 확대 기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산지 통일 규범 마련

RCEP은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양자 FTA 체결 때 발생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히고설킨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타기를 수출하려면 원산지 기준이 제각각 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RCEP로 하나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 ◆일본과 FTA 체결 효과

RCEP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10위 경제 대국과도 모두 FTA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신용대출 영끌’ 내 집 마련 막힌다... 실효성 논란

(영혼까지 끌어 쓴다)

## 금융 이슈리포트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

“이미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아 가장 큰 타격은 서민” 지적 주담대 등 가계대출 영향 우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쓴다)’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일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 ◆1억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9조 6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증가 폭만 보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신용대출이 주도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잔액은 8월 5조7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증가폭이 감소세로 완화되다 10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규제에 대해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DSR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했다. 앞으로 고소득자는 특수한 경우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총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가 대출 계약 후 1년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금이 회수된다.

### ◆가수요 증가 등 실효성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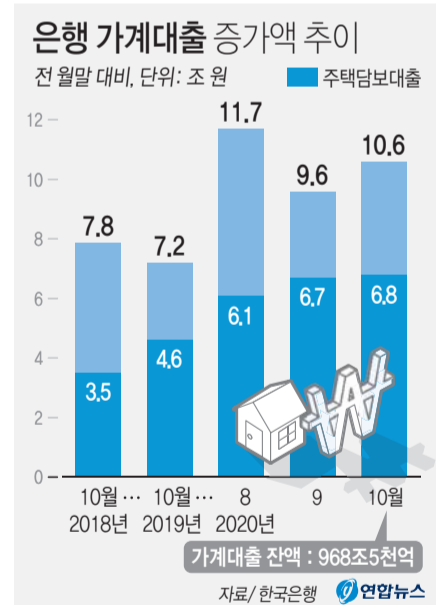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을 넘게 받아쓰고 있다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

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해서다. 즉,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는 신용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규제가 오는 30일부터 강화되는 만큼 고소득층에서 ‘일단 받고 보자’식의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비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신용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저소득자들의 신용대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내년 1분까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신용대출은 급증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전 월말 대비 11조7000억원 늘어난 948조2000억원이었다. 잔액기준으로는 7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이 5조7000억원 늘었다. 비율상으로 기타대출이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의 고 DSR관리는 개인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받을 사람은 다 받은 상황에서 고DSR을 조절한다면, 결국 은행에서 한도까지 꼭 차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